

마통·주담대 이어 전세대출까지... 은행, 가계대출 옥죄는다

(마이너스 통장)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700조 작년 32.7조 대비 4.88% 늘어 정부 권고 증가율 5~6% 근접 은행들, MCI·MCG 등 취급 중단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약 한 달 새 0.4% 포인트 가까이 뛰고 전세자금대출 한도 등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4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올 초 금융당국이 제시한 총량규제 권고치에 근접한 만큼 대출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관련기사 3면)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02조8878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해 4.88% (32조7339억원) 늘면서 대출 증가율이 정부 권고치(연 5~6%)에 근접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인 6%에 이르기까지 1.12%p, 금액으로는 7조4754억원

가량 남긴 상황이다. 권고치 하한 5%까진 불과 0.12%p(7738억원) 남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를 옥죄기 위해 은행들에 올해 가

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말 대비 5~6%로 맞추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에 이어 전세대출, 집담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집담대출 등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오는 12일부터는 경찰청 협약 무궁화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200%에서 100%로 줄인다. 무궁화 신용대출은 국민은행이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내놓은 경찰공무원 전용 대출상품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대출과 모기지 신용보증(MCG) 취급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한 차주(대출받는

사람)는 LTV(담보인정비율) 만큼 모두 대출을 받지만 가입하지 않은 차주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MCI대출과 MCG 대출의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게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강도 높은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세심하고 완만하게 대출규제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기업 68%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과도하다"

전경련, 관리 대상업체 350곳 설문 84% '2030 NDC, 경영에 부정적'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강화를 놓고 산업 관계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지게 됐다며 곳곳에서 불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업체 350곳을 대상으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응답 업체 126개)를 실시한 결과, 주요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68.3%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2030 NDC가 경영에 부

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 기업도 84.1%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했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오는 2050년까지 산업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역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제시된 산업부문의 감축목표 역시 과도하다는 응답이 80.9%에 달했고 전력요금도 지금보다 평균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 업체들의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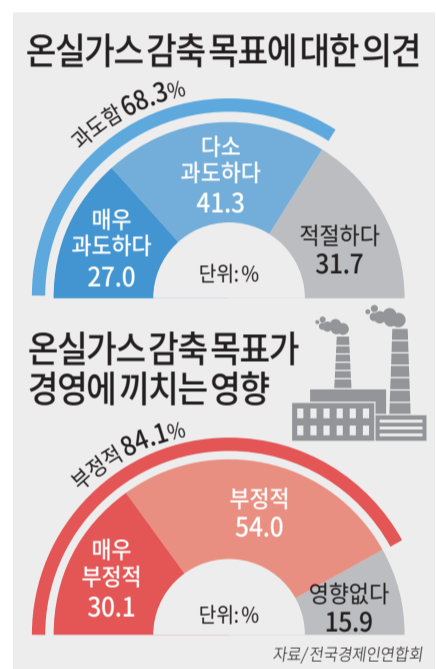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력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응답을 평균화한 결과 전력요금이 26.1%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안에 따르면

지난해 6.6%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50년 56.6~70.8%까지 늘리는 한편 지난해 28.8%였던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6.1~7.2%로 낮출 계획이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이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35.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현실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하고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 3만여개 인기상품 +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우리나라 대졸초임, 日 보다 60% 많아

경총, 구매력평가 환율 적용땀 27% ↑ 韓, 중소-대기업간 격차 월등히 높아 5인 미만, 300인 미만의 55% 불과

우리나라 대졸 초임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도 더 커지면서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대졸 이상 학력 29세 이하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 국내 500인 이상 사업체 대졸 초임이 1인당 GDP 대비 4만7808달러로 일본 1000인 이상 사업체 대졸 초임(2만9941달러)보다 59.7%나 많았다.

전규모 사업체로 보면 우리나라가 2만7379달러로 일본(2만7540달러)보다 0.6% 낮긴 했지만,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3만6743달러, 일본이 2만8973달러로 26.8% 높은 것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별 격차가 월등히 컸다.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대졸 초임 평균이 5084만원,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 총액 기준으로도 469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2599만원으로 55.4%에 불과했으며, 전체 대졸 정규직 신입 초임도 3391만원에 머물렀다.

상용직 대졸초임을 100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151.7이나 됐다. 일본 대기업이 113.4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훨씬 컸다는 얘기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대졸초임 격차는 일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대기업의 대졸초임 수준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임금 격차 심화 등 각종 사회갈등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용 기자 juk@